



# “KBS 고대영, 돈 받고 뉴스 팔았다!”

## 기사 불(不)보도 대가...국정원서 200만 원 수뢰 혐의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KBS 고대영 사장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국정원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보도 통제'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KBS를 담당하던 국정원 정보관이 '국정원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不)보도 요청을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줬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국장은 바로 고대영 현 KBS 사장이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국정원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그리고 해당 국정원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검찰에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KBS보도국장이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뉴스 편집을 바꿨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의 보도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뉴스 가치가 매우 큰 의혹보도였다. 실제로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한 반면, KBS는 철저히 무시했다. 리포트는커녕 단신 뉴스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정치권 반응에 대한 단신 기사가 작성됐지만, 소속 부서는 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뉴스 편집의 차이는 결국 취재와 편집을 총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고대영 사장은 권력과 돈에 저널리즘의 기본을 팔아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국장 이후 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승승장구했던 고대영 사장의 '뒷배'가 당시 국정원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고대영 사장은 지난 2011년 이미 위키리크스 폭로 사건에서도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 (frequent Embassy contact)'이라는 미국 정보 기관의 평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고대영 사장의 국정원 돈 수수 의혹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고대영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 부역함으로써 공영방송 KBS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그런데 만일 이처럼 국정원의 더러운 돈까지 받아가며 부역을 했다면 단 한 순간도 고대영을 KBS 사장 자리에 뇌물 수가 없다. KBS 전 직원은 고대영 사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盧, 고가시게 수수... 적당히 망신줘라” 국정원·검찰 의도대로 KBS 뉴스9 '단독 보도'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인 국정원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만나 '고가시게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라'고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4월 22일 KBS는 9시 뉴스를 통해 <검찰 “박연차, 노 부부에 명품시계 2개 선물”>이라는 단독 보도를 방송했다. 타 언론사보다 빠르게 국정원과 검찰의 각본대로 움직인 셈이다.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논두렁 명품 시계' 사건을 부각시켜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에 나설 때, 고대영 보도국장이 장악한

KBS 뉴스는 국정원과 호흡을 맞췄던 것이다.

지난 9년간의 불공정 방송으로 KBS에 더 이상 실추될 명예와 신뢰가 남아있을까 싶은 작금의 상황이지만, 부끄럽고 부끄러운 따름이다. 고대영 사장은 아직까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실체가 모두 밝혀졌듯이 국정원-검찰-KBS로 이어지는 권언유착의 검은 고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고대영 사장은 더 이상 회사를 망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즉각 사퇴하라.



국정감사 보도자료 분석

# 혼자 먹은 김밥 · 햄버거도 ‘업무상’

## 생계형(?) KBS 이사, 업무추진비로 끼니 해결...감사원 조사 착수

공영방송 물락의 공범자들인 KBS 적폐 이사들이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이사들은 김밥이나 햄버거 가게, 커피숍 등에서 혼자 사용한 2500원~8000원 정도의 소액 영수증까지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 <편집자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은 KBS 강규형, 차기환, 변석찬 이사가 법인카드를 김밥이나 햄버거 가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애견 동호인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강규형 이사는 지난 8월 김밥\*\*에서 2500원 등 총 4차례 김밥 전문점을 이용했고 외식업체인 맥도\*\*에는 무려 50회, 37만2600원(평균 7452원)을 사용했다.

차기환 이사는 맥도\*\*에서 43회, 25만4700원을 사용했다. 평균 5923원으로 역시 혼자 식사한 비용으로 보인다. 변석찬 이사는 버블티 음료 전문점 ‘공\*’를 주로 이용했다. 모두 24건에 12만 8000원으로 평균

5333원을 사용했다. 윤 의원은 이들 모두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장소별로 분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강 이사는 자신의 주소지 근처



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수 사용했다.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깃집에서 6회(58만9000원),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에서 17회에 걸쳐 약 9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이탈리아 음식점에서는 29회에 걸쳐 230여만 원을 사용했다.



KBS 이사는 비상임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개최시 거마비 30만원과 매월 250만원 가량의 자료조사비를 현금으로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사장은 250만원 이사는 100만원 한도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일부 이사들은 혼자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업무’에 국한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식비 등의 경우에는 2인 이상 모임의 경우에만 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른바 ‘혼밥’은 업무가 아니다. KBS 취재기자의 취재비 처리 기준에서 1인 사용 영수증은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사회 사무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책임된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직원들을 독려하는 역할’이라고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했다. 새노조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사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적폐 이사 해임! 불법 경영 심판!

### 방통위와 감사원은 권한 행사를 미루지 말라!

KBS 파업이 두 달을 채워가고 있다. 방송 파행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국가적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상적인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영 KBS 사장과 KBS 이사회는 ‘나몰라라’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수신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못 느끼는 듯하다.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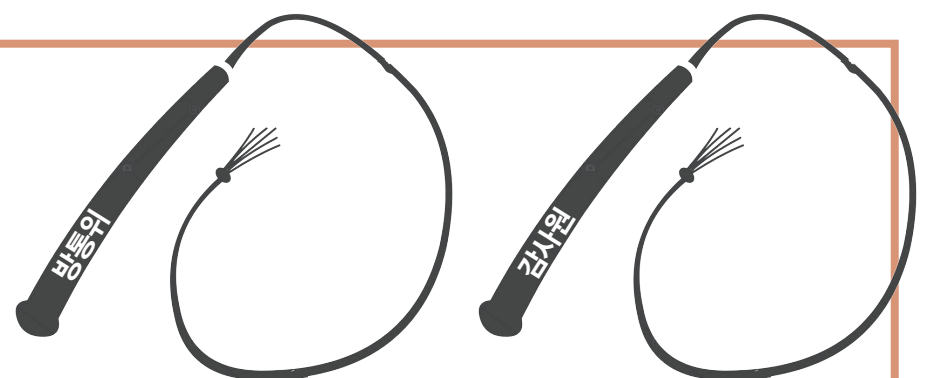
말로 안 되면 채찍이라도 써야 한다. KBS에 대한 채찍은 누가 들어야 할까. 법에 나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감사원이 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KBS 이사를 뽑고 자를 수 있는 권한이 방통위에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KBS 이사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고대영 사장의 ‘적폐 경영’에 사실상 눈 감아왔고, △KBS가 공적 업무용으로 제공한 관용차와 법인가



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

KBS새노조는 총파업 이틀째인 9월 5일 문제있는 이사들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방통위는 요지부동의 모습이다. 법에 정해진 권한조차 미루고 있으니 실망스런 대목이다.

감사원도 채찍을 들 권한이 있다. KBS는 언론사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다. KBS에 대한 기관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사들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 △관용차 유용 문제, △신사옥 건설 문제 등을 감사하고 있다. 답답한 건 속도다. 벌써 몇 달째 감사만 진행 중이다. 언제 결론을 내리는 건가.

방통위와 감사원은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하다. ‘감사원이 먼저...’ ‘방통위가 먼저...’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일종의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한 행사를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다. 방통위와 감사원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